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내정 文 대통령 女 공약 달성 예감

靑 “피우진 포함 32%”...대체적 잘했다는 평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힌 뒤 취재진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직 여성 비율 30% 공약이 사실상 지켜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23일 문 대통령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로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조대업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지 열흘 만이다.

김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현 내각의 여성 장관 수는 총 5명으로 18개 정부부처를 기준으로 하면 27.78%가 된다. 앞서 국회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임명된 여성 장관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다.

정외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부 조직법 개편에 따라 장관으로 승격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모수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보훈처를 포함해) 19개 중에 6개 (부처)를 (여성 장관 임명) 하게되면 약 32%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피 처장을 포함해서 계산할 경우 정확히 31.59%가 나온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일 여야 간에 합의됐다. 이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하며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의 주장대로 보훈처장을 장관으로 인정한다면 여성 장관직 비율 30% 공약은 달성된 셈이다. 야당에서도 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그 정도면 많이 하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가보훈처를 포함시킨다면 금융위원장, 권익위원장, 관세청장 등 기타 장관급 지위 역시 포함해서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관급 공무원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3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구성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명확히 지위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인사를 보면 정치권에서는 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녀 동수내각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실현하는데도 한 걸음 다가갔다의 평이다.

한편 김 의원 역시 “현역 의원 불패 신화”를 이어갈 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현역 의원 출신으로 임명된 장관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이다.

문 대통령이 김 의원을 임명한 데는 앞서 조대업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던 것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외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역 정치인 출신이 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후보자, ‘현역 불패’ 기록 이어갈까

김부겸·김영춘·김현미·도종환 모두 민주당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 입각 무패 기록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는 23일 김 의원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 박수현 정외대 대변인은 “노동문제와 노동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폭넓은 친화력을 바탕으로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탁월하며 검증된 정무역량으로 우리 사회 다양한 각종 현안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현역 의원 출신은 총 5명이 된다. 김부겸 행정자치부·김영춘 해양수산부·김현미 국토교통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 출신이다.

앞서 취임한 장관 모두 순조로운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친 만큼 김 의

원 또한 큰 어려움 없이 청문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가 없다.

특히 조대업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전문성 결여 등의 이유로 낙마한 상황에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의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핵심 관계자는 “지난번 조 전 후보자는 노동전문가라고 했는데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해 곤욕을 치렀다”며 “그런 면에서 김 의원은 능력과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집안단속 못한 민주당, 불참 의원 26명에 ‘비난쇄도’

文정부 첫 추경 표결 과정에서 과반수 부족 상황 발생... “여당 무능함 책임져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정족수 미달인 상황에 교섭단체 원내수석 등을 불러 회의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재적 299인, 재석 179인, 찬성 140인, 반대 3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열린 본회의서 통과됐으나 표결 처리 과정에서 불참한 민주당 의원 26명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표결 처리를 위한 과반수 150명 중 4명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민주당은 읍소하며 한국당의 참여를 독려하는 일이 발생했다.

가까스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예산안은 통과됐으나 민주당 내 불참한 26명의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빚발치고 있다.

바른정당은 서면 논평을 통해 “120석의 거대 여당인 정부 여당이 일차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위한 긴장감을 갖고 책임을 져야 했다”며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단속하지 못해 의결 정족수

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했으나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통해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 나타난 여당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 의원들의 참여 저조로 본회의 통과가 난항을 겪었으니 앞으로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유한국당이 어젯밤 국회의장에 게 요청해서 의장의 중재로 자유한국당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 오전 9시 30분으로 미룬 것”이라며 “여기에서 (우리 당으로서) 긴장감이 떨어진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해 처리한다고 하니 정족수 문제는 크게 없다고 의

원들 일부 판단하면서 약간의 누수 생긴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날 불참한 여당 의원 26명은 회의 입장을 소화하거나 당 지도부의 양해를 구해 국내 지역구 활동,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국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며 “회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불참한 의원들이나 예결위에서 진통 끝에 합의해 온 추경안 표결 참석을 거부하는 자들이나 도대체 눈 뜨고 볼 수 없는 작태들이 국민 면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민심도 싸늘하다. 불참 의원들에 대한 페이스북 게시물에 비난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불참한 의원들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A 네티즌은 “의원님의 무책임함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당원동지들에게 정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B 네티즌은 “오늘의 행보는 실망이다. 국회는 왜 안 간 것이냐”고 물었다. C 네티즌은 “민주당 의원들 정신 못 차리는 것이냐 정신 좀 차려라”며 맹비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추경 예산 표결에 남다른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국민과 권리당원의 강한 공분을 사고 있다”며 “해당 의원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한국당 “최순실 재판 생중계, 21세기 인민재판”

자유한국당은 23일 대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하급심의 TV 생중계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피고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재판을 생중계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여론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사법부라도 삼권의 한 축으로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사법부 행보를 보면 과연 대법원을 위

시한 사법부가 중심을 잘 잡고 있는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무 원칙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들의 신뢰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마저 여론에 휘둘러 정권 홍보에 이로운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하급심 재판 방송 중계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해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